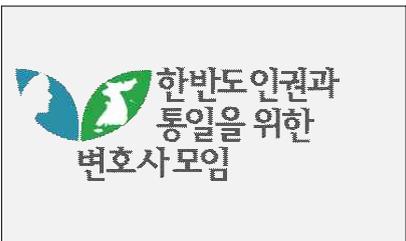




연락처  
02-6497-5935  
02-599-4434  
홈페이지  
nkhumanrights.org

**보도자료**  
**247차 화요집회**



#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법 전면개정 토론회

## - 북한인권법 가로막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촉구하며

**일시 : 2024. 2. 13(화) 11:00**

**장소 : 한변 회의실(교대역1번출구 우측 길50M 전방,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42 동진빌딩 6층)**

10년 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그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보호책임(R2P)을 적용하여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의 재단이사 추천 회피로 출범하지 못하여 사문화되어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우선시하는 등 부적절한 면이 컸지만 11년 만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의원 236명 중 212명 찬성, 24명 기권) 통과된 뜻을 존중하여 ‘화요집회’ 등을 통해 오직 민주당에 그 정상 시행을 촉구해왔다. 특히 작년 2월 28일 제200차 화요집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제7주년을 맞아 대표들이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가 재단이사 추천을 미룰 경우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 바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서도 유엔 총회가 19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했음에도 8년째 재단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북송,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으로 2,500만 북한주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제 우리는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인 핵 공격대상으로 삼아 대남교류기구를 모두 폐지한 북한 정권에 맞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비현실적이고 불완전한 북한인권법을 전면 개정하고, COI 보고서에 맞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무산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 2. 12.

※별첨 : 발제문(김태훈 변호사)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겨레얼통일연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물망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인권시민연합, NK지식인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와 연대, 남북통일당,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자유실천연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파만파, 나라지킴이교교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 나라사랑기독연합, 자유민주연구원, 환태평양문화연구원, 한국노년인권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실향민중앙협의회,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북한전략센터, 모두모이자,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카이로스아카데미선교회, 국군포로가족회